

체코 원전 자금조달 논란 일축... “계약 무산은 일방적 주장”

산자중기위 국감

안덕근 장관 “체코 원전 문제없다”
체코 원전수수 EU 규정 위반 반박
대기업용 전기요금 인상 교육지책

체코 신규원전사업이 체코전력공사의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무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산업부 대상 종합국감에서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경쟁국으로 참여한 프랑스의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 주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 등이 도마에 올랐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랑스 전력공사의 EU 역외보조금 위반 행위 제소에 대한 판단이 최장 160일이 걸린다”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체코 원전 최종 계약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EU 역외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금 규정은 2023년 7월 12일자로 발효되기 전에 게시가 된 조달 절차에는 적용이 안된다”며 “지금 진행 중인 체코 원전은 훨씬 전에 게시된 것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우리나라는 한수원이나 한전에 부당한 보증을 지급한 것도 없고 금융지원도 OECD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어 위반될 부분은 없다”고 했다.

송 의원이 “얼마 전 체코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야당 부총재가 체코전력공사의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 본 계약 체결이 무산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는 질의에 안 장관은 “체코전력공사의 자금조달 능력부족에 따른 본계약 무산은 일방

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체코 원전 수수 금융지원과 의혹과 관련해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코바니 5호기와 6호기를 구분하지 않고 여전히 금융 지원이 없는 것처럼 말한다”고 지적한데 대해 안 장관은 “(두코바니) 5호기 1개 입찰을 가지고 여태까지 얘기했었고 논의한 바가 없다”며 “6호기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조건이 맞으면 우리 신용기관이 금융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전날 발표한 대기업 전기 요금을 중심으로 인상한 전기요금 조정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지책의 하나로 마련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전날 산업부와 한전은 주택용·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는 대신, 국내 전력사용량의 절반을 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이날부터 평균 9.7%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인상안은 지난 정부에서 비정상적으로 억제됐던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키고, 억제됨으로 인해 한전의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인상한게 맞느냐”고 묻자 안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이번 인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전반적으로 산업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안 장관은 “부득이하게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부분은, 지금 유박 민생과 서민경제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지책의 하나로 마련한 방안”이라며 “향후에 지속적으로 (전기요금)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올해 더 이상 인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해수부·기상청

극지환경 세밀 관측 등 생태계 기후 적극 대응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24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라, 해수부가 국가해양관측망, 해양환경측정망 등을 구축·운영해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의 기후변화를 관측한다. 이를 통해 해수, 염분, 해류, 해빙, 해수면 높이 등 기후요소와 해당 요소들의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 빙하 유실 등 해양·극지의 이상기후 및 극한 기후와 관련된 감시정보를 생산한다.

기상청은 이러한 감시정보를 토대로 기온, 강수량, 해수면온도, 일사, 바람, 파고 등의 기후요소를 비롯해 엘니뇨·라니냐 등에 대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한다.

해수부와 기상청은 또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정보와 예측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일반 국민과 정책 입안자 등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양 기관은 ‘기후변화 감시예측 전문가’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해 전 지구 및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원인 규명, 기후체계의 상호작용 등 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우 다단계 논란... “담합 방지·수수료 조정 방안”

농해수위 국감

송미령 장관 “유통경로 간소화 동의”
공정거래·유통구조 개선 방안 제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한우 유통경로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한우 유통과정에서 중간유통마진이 높아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24일 “한우 유통과정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한우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 통상적으로 7~8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친다. 농가-우시장-도축장-경매장-가공장-도매상-유통업체 등이다. 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의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같은 구조에서 유통업체들은 20% 안팎의 마진을 챙긴다. 반면, 농가는 한우 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마리당 손해가 늘고 있다

조 의원은 또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의 담합 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의

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지난 5월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과도한 위탁수수료를 적정선으로 만들자는 방안도 넣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신고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공영도매시장에 의존하면 도매법인의 독·과점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경로를 만들어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농해수위의 위원들께서 지원을 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를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임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추 소비자가격 관련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통계청의 수급 예측의 차이를 지

적했다. 지난 2022년의 경우, 농촌경제연구원과 통계청의 배추 생산량 조사에서 21톤(t)이나 차이가 났다. 연구원은 올해 6월 배추가 1~2만t 부족할 것이라 예측했는데 실제 부족분은 갑절 이상인 5만t에 달했다.

송 장관은 “연구원과 통계청은 조사 시기와 대상, 범위에 차이가 있어서 구조적으로 수치가 가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연구원은 생산자들의 재배 의향조사를 통해 사전 예측을 하는 것이고, 통계청은 조사 작기가 시작하면 생산 후에 사후 조사를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수급 정확도 향상 방책으로, 송 장관은 ▲생산자들의 재배의향 조사 및 기상 상황 결합 ▲농림 위성 정보를 활용 등을 제시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국립공원 7곳, 연간 온실가스 192만톤 흡수

국립공원공단, ISO14064 검증서 획득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설악산 등 국립공원 7곳의 온실가스 흡수량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온실가스 검증 국제공인기관인 영국왕립표준협회로부터 국제표준(ISO14064) 검증서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국립공원 7곳(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치악산, 북한산, 태안해안)을 대상으로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을 조사·분석했고, 지난 8월 영국왕립표준협회에 ISO14064 검증을 의뢰했다. 영국왕립표준협회는 현장

실사를 거쳐 국립공원 7곳의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 검증서를 지난달 10일에 발급했다.

검증서에 확인된 국립공원 7곳의 연 평균 온실가스 흡수량은 1헥타르(ha) 당 14.33CO₂t으로 나타났으며, 소백산이 16.98CO₂t으로 가장 높았다.

국립공원 7곳(면적 13만4598.6ha 기준) 전체의 연 평균 온실가스 흡수량은 192만8797CO₂t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278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해외 농업·산림 개발지원 법적기반 강화

농식품부, 손실보상 포함 지원책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24일 국내 농업 기계 및 자재 등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공포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의 일부 개정안이 이달 25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률에 따라,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과 관련된 농업 기계·농업 자재 등 농업투입재 산업 및 이에 준하는 산림 산업의 해외 진출 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 관련 기업들과 함께 진출할 시 큰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정해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개정 법률 시행으로 실효성 있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과 체계적인 농림 분야 국제협력(ODA)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농림분야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국제협력(ODA)사업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은 또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비상시 반입 명령에 이행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보상 근거도 마련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정인교 통상본부장

G20 무역투자장관회의 WTO 개혁 등 협력 논의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G20 무역투자장관회의에 참석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 체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G20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이라는 의장국 주제 하에 WTO 개혁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 국제무역과 여성,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투자협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 등 4가지 의제를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WTO 개혁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 국제무역과 여성(세션1)’에 관해 “WTO 분쟁 해결제도 개혁 등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또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양립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주도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G20 회원국들의 지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WTO 투자원활화(IFD) 협정이 개도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조속한 WTO 법적 편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